봄

「대전형 녹색도시」 만들기

정환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정부는 2008년 8월 15일에 제시했던 친환경적인 "녹색성장" 정책과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뉴딜" 정책을 융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2009년 1월 6일 발표하였다. 2009년 1월 6일에 발표된 '녹색뉴딜(green new-deal)'은 2008년 8월 15일에 제시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보다 현실화하고 구체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36개 사업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96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에서는 2009년 1월 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전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최종적인 대전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9개 핵심사업, 38개 연계사업 등 총 47개 사업에 약 3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61,951개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 정책에 부응하면서,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녹색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대전시의 그린시티, 녹색뉴딜사업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화된 세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2008년 10월에 선포한 "그린시티 대전"의 6개 분야 28개 세부사업과 2009년 2월 대전시 녹색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9대분야 9개 핵심사업, 38개 연계사업, 그리고 본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낸 8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국내외 타 지자체의 녹색뉴딜사업 및 친환경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형 녹색도시"의 완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9대분류 66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2. 대전시 녹색도시의 방향성

현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되, 전지구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의 개념은 에너지절약, 새로운 대체에너지개발, 저탄소기술개발, 녹색교통망 확충, 4대강 치수 등 수자원 확보,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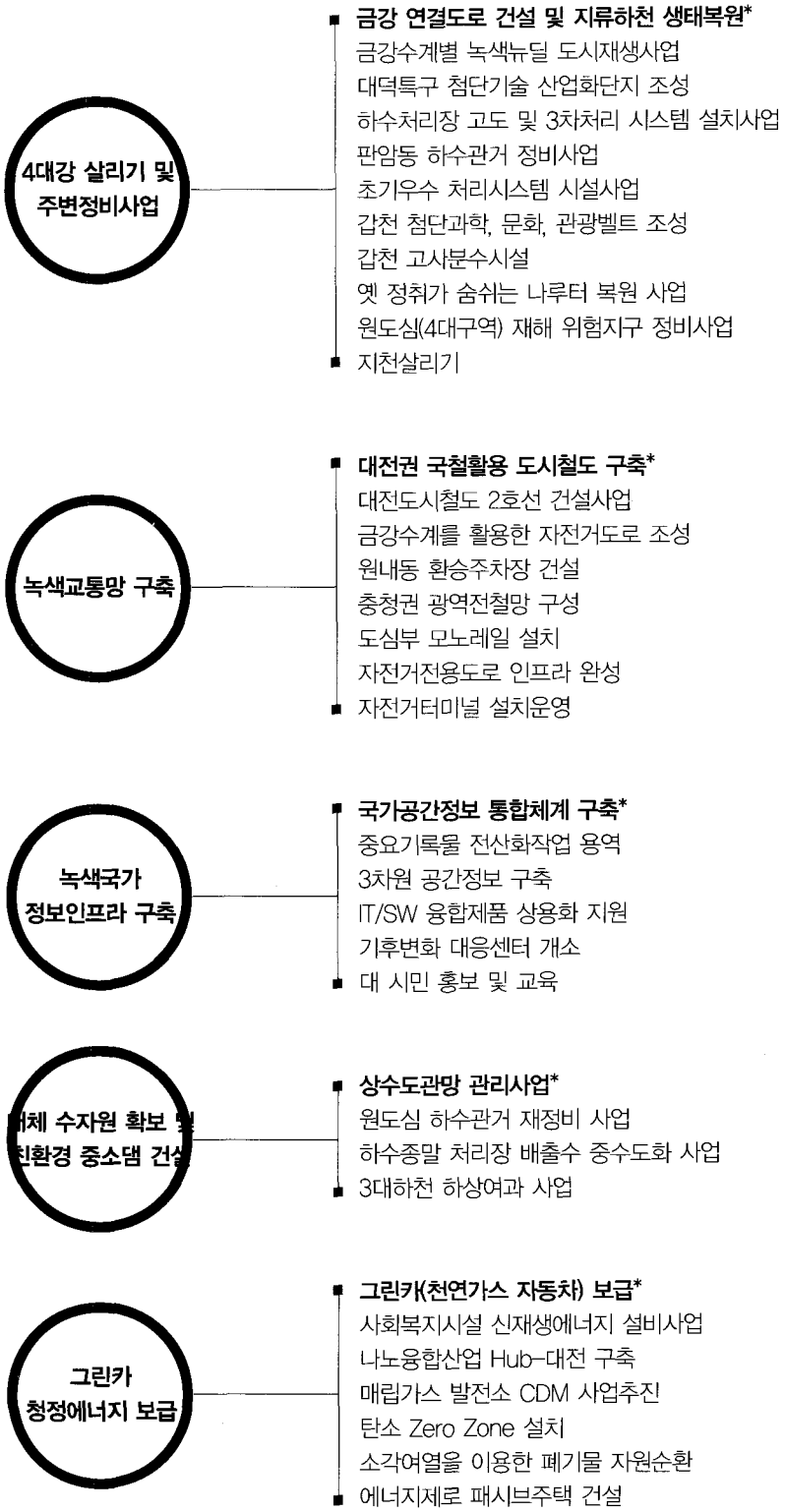
녹색기술의 개발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위기의 상태에서 현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녹색성장' 이었으며,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성장'에 녹색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미한 '녹색뉴딜'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오히려 이를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대전시 차원의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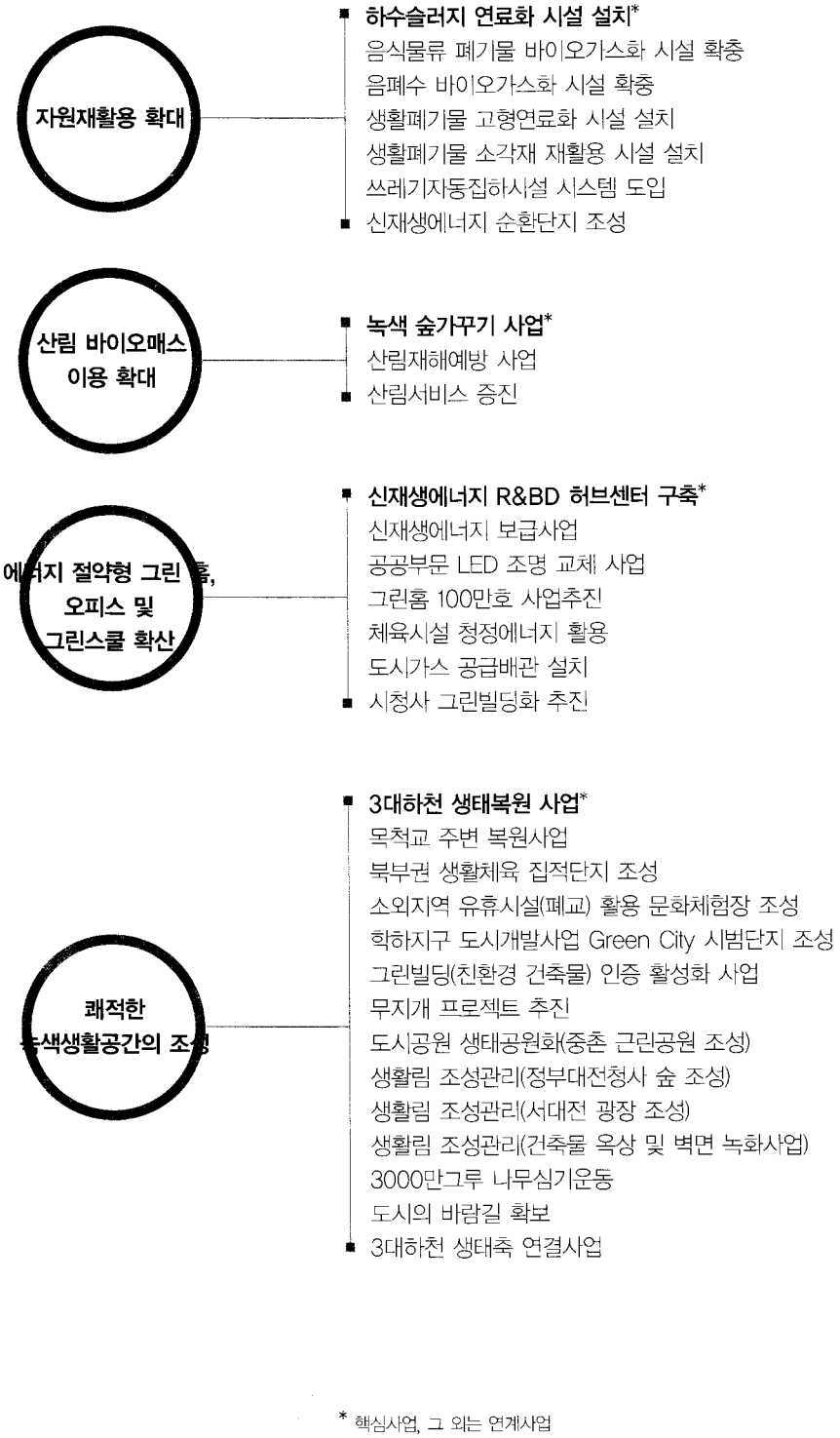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녹색도시 대전"의 완성을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지자체들 간의 녹색뉴딜사업, 기후변화 대응책 등을 분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그린시티 28개 과제와 대전시 녹색뉴딜 47개 사업을 면밀히 분석, 기존 사업들에서 누락된 기반 구축 사업,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여 9대분야 66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제시된 대전시 66개 사업에는 '대시민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 대응센터 개소' 등 대전시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체 사업의 주요 토대가 되는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대하천 생태복원', '목척교 생태복원', '지천살리기' 등 대전시를 관통하는 3대 하천과 지천들에 대한 부분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3대하천 생태축 연결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전체 하천으로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된 사업들을 하나의 대형사업으로 묶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녹색뉴딜" 사업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고, 녹색도시 대전의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1 대전시 녹색도시 프로젝트(9대분류 66개 과제)





* 핵심사업, 그 외는 연계사업

3. 대전형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내용

3.1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은 금강수계에 대한 생태복원, 대전시의 3대 하천의 수질개선 등을 망라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경우 금강의 지천인 3대 하천변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므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인해 천변 정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은 치수, 하천의 생태 복원 등에도 이점이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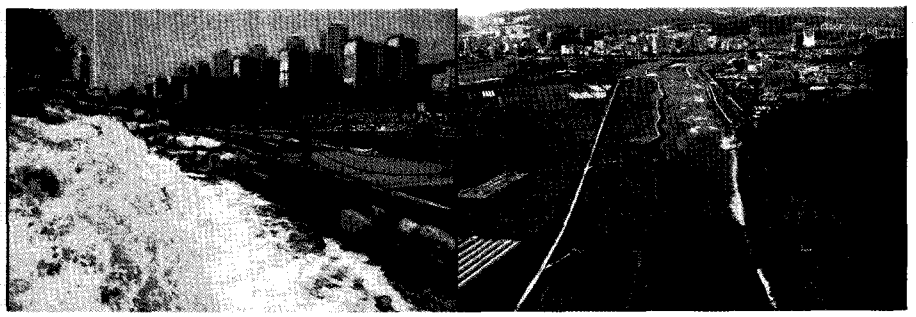
특히 대전시의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은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해, 지류하천 생태복원, 하수처리장 고도 및 3차처리 시스템 설치사업, 초기우수 처리시스템 시설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비용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의 조성" 사업의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녹색교통망 구축 사업

2009년 2월, 정부의 녹색뉴딜 방침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 효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면서, 대전시는 2009년 1월 발표한바 있던 대전시 녹색뉴딜 사업을 2009년 2월에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수정 보완된 대전시 녹색뉴딜 사업에는 기존계획에는 빠져 있던 "대전권 국철 활용 도시철도망 구축",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 전철망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에 추가되었다.

그림1
대전천 통수(좌) 및 갑천(우)



대전시 녹색교통망 구축의 중심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아울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국철을 활용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대전시 녹색교통망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에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운행에 관련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활성화에 지원하는 등 자전거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시의 "대전권 국철 활용 도시철도망 구축",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 전철망 구축" 등 녹색교통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전시의 교통체계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여, 녹색도시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정부는 녹색 뉴딜의 일환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면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다.

정부는 우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국가 정보인프라 통합구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시가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과 동시에 중요기록물의 보존과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기록물 전산화작업 등이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녹색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대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기후변화 대응센터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향후 대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Think Tank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대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정책 개발, 정책 평가 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광역권역의 기후변화대응에 있

그림2
대전지하철(좌)
자전거 활성화(우)

어 선도적인 위치에 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녹색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대전시 등 관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절약, 자전거 이용확대, 가정 또는 근무지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노력 등은 단기간에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며,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관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시에서 수립한 많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민의 의식전환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반면, 그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등한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대 시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3000만그루 식재사업과 같이 대전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4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사업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사업"은 우수 등 대체수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고자 하는 부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홍수피해 예방 및 우수 재활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설치,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통해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하는 사업들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대전시의 대체 수자원 확보사업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중수도화 사업", "하상여과 사업" 등 4개의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림3
공간정보(좌)
기후변화센터(우)

그림4
전기마을버스(좌)
태양광 발전시설(우)

3.5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차량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 등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 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연료 보급 등 친환경 그린카의 기술력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 보급하여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사업방향과 보조를 같이 하기위해 "그린카 보급",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탄소 Zero Zone 설치", "에너지 제로 패시브주택 설치" 등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위해 총 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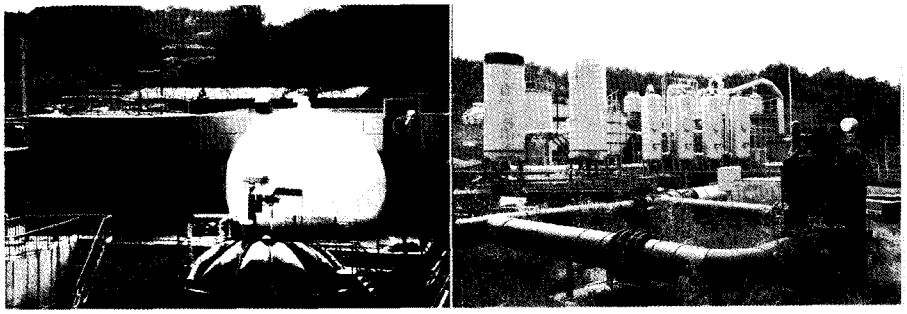
3.6 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

"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은 석유자원 고갈이라는 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자원,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이다.

자원재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들로는 "폐기물 고형 연료화 사업", "바이오가스화" 등의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과 "초본계, 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가축분뇨 자원화" 등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전시의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하수슬러지 연료화 시설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재 재활용 시설 설치" 등 7개 세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5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시설(좌)
금고동 가스발전 시설(우)



3.7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탄소흡수원의 확대 조성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림의 기능 개선과 경제성을 제고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 확대를 위한 숲가꾸기 및 산물 수집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전시의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녹색 숲가꾸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산림재해예방 사업" 및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여 3개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3000만그루 녹화사업 및 도심 녹화사업의 일환인 "생활림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푸른 숲(좌)
숲 가꾸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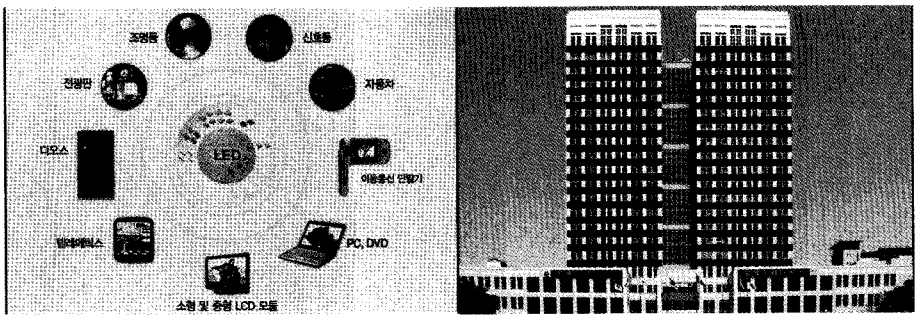


그림7
LED의 활용영역(좌)
대전시청사의 벽면에 태양광 판넬을
부착한 모습(우)

3.8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사업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사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비록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향후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사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 오피스 개발 및 공급, 학교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재 사용과 빗물 이용 시설 등의 조성, 공공부문 LED 교체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대전시의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R&D 허브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부문 LED 조명 교체 사업", "시청사 그린빌딩화 추진" 등 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대전시청사를 태양광 판넬을 이용하여 그린빌딩화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전시만의 정책이고, 이로 인해 파급되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9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의 조성 사업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의 조성 사업은 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하고, 개발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사업 등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대하천 복원사업", "생활림 조성사업" 등 하천 복원, 건물녹화,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 유휴시설 재활용 등 14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특히 "3대하천 복원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의 수질개

그림8
대전시 생태하천 복원 팜플렛(좌)
복원된 생태하천(우)

선 사업과 연계하여야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효가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3대하천 생태축 연결사업'을 제안하였다.

4. 녹색도시 대전의 정책방향

4.1 녹색도시 운영계획

녹색도시 운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녹색도시 대전」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실, 국, 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두고, 녹색도시 관련 추진상황을 월단위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의 녹색도시 조성 추진위원회(가칭)은 제시된 바와 같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자문하에 기후변화 대책 사업단을 포함하는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정책기획관실 또는 시장 직속기관에 녹색도시조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인력을 중앙집중식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진과제별 Action Plan 구축

현재 녹색도시 대전의 추진과제는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총 6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각 세부과제별로 Action Plan을 구축하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추진과제별 Action Plan은 이행평가방안 모식도와 같이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Action Plan을 차별적으로 이행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이나 수립된 Action Plan보다 비용효율적인 효과가 높거나 녹색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획기적인 정책은 새로운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Action Plan을 점검하고 이행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녹색도시 대전을 위한 계획이 잘 수행되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추후 대전시의 여건이 변화할 경우라도 탄력적인 계획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2 녹색도시 기대효과 및 정책방향

녹색도시 대전의 기대효과

먼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녹색도시 정책의 추진으로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 및 3000만그루 식재사업 등과 같이 기후변화 적응사업에도 선도적인 도시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3000만그루 식재사업은 더욱 세밀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6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향후 대전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도시로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자체간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대전을 완성하여, 환경녹색도시 대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녹색도시 조성전략과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을 융합/연계하여 녹색경제성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녹색사업들의 체계적인 통합/연계 과정을 거쳐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 재정의 효율적 확보 및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도시 대전의 정책방향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뉴딜" 사업의 기본 전제는 온실가스 저감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 이었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SOC사업이 온실가스 저감 또는 흡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의 저감은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그린카, 자전거 및 지하철 등과 같은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로 1차 에너지원의 소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되어지며, 특히 대전시의 경우 여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는 방안이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리면서 대전시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진중인 "녹색뉴딜" 사업에서도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의 경우가 운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단순 토목 공사라는 면만 부각되어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변 공간이 생태공원화 되어 수자원의 확보가 이루어 질 경우, 이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온실가스의 흡수를 돕고, 도심의 온도 상승과 하강을 억제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시민의 편의와 위락을 도모할 수 있고, 공사기간 동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만을 확장할 경우 대전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용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기온의 변화, 홍수와 가뭄의 발생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전시에서도 4대강 살리기 및 하천정비에 있어서 홍수 및 가뭄의 대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3대 하천이 있고 또 지류하천들이 대전시를 관통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하천정비만 제대로 되어도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길과 대전시를 관통하는 바람길을 잘 접목할 경우 대전시는 에너지 소비량을 원천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녹색도시로써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대전시민들의 "그린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환경선진도시의 사례에서 와 같이, 결국 도시의 주요 공급자이자 소비자는 시민이므로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에서 주도로 하는 녹색도시 정책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게 된다.

시작은 대전시에서 주도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후세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향후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부분이 시민의식 전환 부분이므로, 대전시에서는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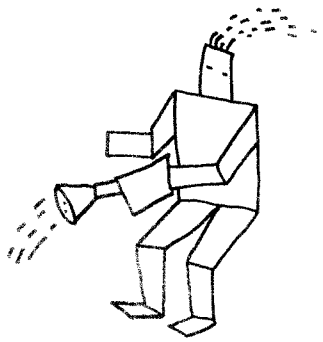
대전광역시(2008), 그린시티선포식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및 이행계획 평가

부산광역시(2007),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

행정안전부(2009.1), 『지역녹색뉴딜사업』추진관련 관계부처-시도 영상회의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08), 2007 신재생에너지통계

정환도(2009.2), 녹색도시대전 프로젝트 구체화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광역지자체 및 시도발전연구원 홈페이지